



US-CHINA WATCHING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US-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美政策研究所

2021. 06. 28 <제36호>

문재인 정부 시대 대북정책을 위해 북미 ‘잠정합의’ 추진이 목표다

전 봉 근 (국립외교원 교수)

정책 제언

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잠정합의’ 추진이 북핵사태의 추가 악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

- △북미 잠정합의로 북핵활동의 전면 동결 합의, △제한된 핵검증 방법 적용, △조속히 2단계 본합의 협상 재개 등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북핵정책 목표가 될 것임.
-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이 자발적으로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소강 국면이 지속되면 오바마 대통령 시기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대북 영양·보건방역의 인도적 지원으로 대치국면의 타개와 대화 분위기 조성

- 5.21 한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상대의 선 양보적 조치(미국은 북한의 무조건 대화 참가 요구 vs. 북한은 미국의 선 태도 변화 요구)를 요구하는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기함.
- 대북 보건방역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2020.9)으로 가동 중인 ‘동북아 보건방역 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추진하며, 이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바이든 대통령의 ‘프레지던트 김정은’ 앞 북핵협상 재개 요구 친서 발송

- 북한의 일인지도체제를 감안하거나, 이란핵합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착상태의 타개와 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정상 간 소통이 필수적이므로 바이든 대통령이 ‘프레지던트 김정은’에게 친서를 송부할 것을 제안함.
- 동 서한은 △싱가포르 공동선언 계승 및 4개 목표 추진 의사 확인 △북미대화 기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모라토리엄 및 일체 군사적 도발 행위 중단 요구,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항을 실현하기 위한 고위실무협상 조기 개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 내용 포함

‘잠정합의’ 준비를 위해 초기 비핵화조치와 초기 상응조치의 일괄타결 패키지 개발 필요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감안하여, 그 이전에 북미 잠정합의 타결을 목표로 북미 간 상호 수용성이 높은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일괄타결 패키지를 개발할 것을 제기함.
- ‘잠정합의’를 위한 초기 비핵화 조치로서 핵실험·중장거리미사일시험 모라토리엄 약속, 핵무기 생산 중단, 핵분열물질 생산시설 폐쇄와 확인 검증, 영변핵시설 폐기,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중장거리미사일 시설 폐쇄 등을 확보함.

대북 보건방역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2020.9)으로 가동 중인 ‘동북아 보건방역 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추진하며, 이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선언했던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소위 ‘핵무기 4불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음

문제제기

1. 북핵 '잠정합의'의 필요성

현재 북한이 '역량껏' 핵무장력을 증강하므로 이에 대한 제어장치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

-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실제 어떤 안팎의 구속도 없이 역량껏 핵탄두와 중장거리미사일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매진하며 매순간 핵역량을 증강시키고 있음.
- 북한은 2021.1. 제8차 노동당대회 보고에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국가 핵무력 건설은 사회주의국가 건설 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등을 천명하며, 핵무장 고도화의 국가정책을 재확인했음.
-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핵사태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최대한 조속히 북핵협상을 재개해야 할 것임.
- 2021년 상반기 들어 영변핵단지에서 5MW 흑연감속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플루토늄의 추가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대북조치가 긴급히 필요함.

북한과 '완전히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 1단계 비핵화를 위한 '잠정합의'가 필요한 이유

- 현재처럼 북핵에 대한 통제 부재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의 핵·미사일역량이 계속 증강되고, 동시에 핵무장국의 위상이 점차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핵활동 동결을 중심으로 하는 북핵 '잠정합의'를 추구해야 함.
- 지난 30년에 걸친 북핵협상과 북핵합의 이행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완전한' 비핵화 합의의 협상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모두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음.
-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북한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시기에도 북한에게 제재압박 또는 군사적으로 핵포기를 강압하는 데 실패했으며, 오늘 북한이 이미 핵무장했고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핵포기를 강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한 차선책임.

현 북미 및 남북 간 대치국면 지속 시 북핵위기와 전쟁위기 재발 가능성 증가

- 북한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를 맞아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핵·미사일활동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계산법 변화와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며 상황을 관망 중임.
- 하지만 내부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정치사회적 위기관리를 도모하고 또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하고, 핵역량 증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함.
- 북한이 대미 협상을 위한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2021년 초 당대회 보고서에서 선언했듯이 오직 '핵보유국'이 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는바, 후자가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임.

오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잠정합의'가 북핵사태의 추가 악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 북한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북한의 남북 및 북미대화 포기·거부, 친중 노선으로 전면 선회, △핵무장 노선으로 완전 선회, 핵보유국 추진, 비핵화 약속 전면 폐기,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무효화 선언 등과 같은 '최악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함.
- 한편, 한국이 바라는 △북한이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 수용, △북미 핵협상의 조기 개최와 '완전한 비핵화' 합의, △완전한 핵신고와 핵사찰 수용, △일괄 핵폐기의 진전 등과 같은 '꿈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따라서 현 정세 속에서는 △북미 잠정합의로 북핵활동의 전면 동결 합의, △제한된 핵검증 방법 적용, △조속히 2단계 본합의 협상 재개 등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북핵정책 목표가 될 것임.
-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 정치력과 유인책을 동원하기보다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소강 국면이 지속되면 오바마 대통령 시기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점도 북한 또는 미국이 중장기적 합의보다는 임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단기적 합의를 모색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바이든 행정부 하 북미관계 전망 및 5.21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

북한이 정면돌파와 병진노선 복귀를 주장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시한부 '전략적 인내' 전망

- 북한은 2021.1. 제8차 노동당대회 보고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병진노선'을 재확인하고, 대외적으로 핵역량을 더욱 증강하는 '핵보유국 옵션'을 추진할 것을 경고했음.
- 당대회 보고 중,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국가 핵무력 건설은 사회주의국가 건설 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등 발언에서 보듯이 북미관계 개선이 없는 한 북한은 핵·미사일능력 증강에 매진할 것임.
- 동 선언으로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선언했던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소위 '핵무기 4불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음.
- 하지만 북한이 2021년 상반기에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핵·미사일시험의 '벼랑끝 외교'를 자제하고, 하기 이유로 대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며, 당분간 미국의 태도 변화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함.
- 첫째, 2017년에 수소폭탄·장거리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이미 대미 보복억제력을 충분히 과시하여, 과거와 같이 매번 미국 신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 도발의 필요성이 감소함.
- 둘째, 2020년 당창건 군사퍼레이드에서 온갖 신형 전략무기를 전시하고 추가 개발계획을 공포하는 '연성도발'을 통해, 실제 핵미사일을 실험하는 '경성도발' 없이 사실상 대미 압박과 도발의 효과를 거두었음.
- 셋째, 국내적으로 경제·식량·보건위기(8차 당대회 보고 중 "극악한 제재생쇄와 혹심한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실제 도발로 인해 추가 제재가 부과되는 것을 원치 않음.

- 넷째, 북한이 중국에게 외교적·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직간접적인 견제가 작용했을 것임.
- 다섯째, 코로나 정국으로 북미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여,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도발이 불필요함.

북한의 '전략적 인내'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 증가

- 북한이 지난 30년 간 미국, 특히 신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벼랑끝외교' 전술이 관행화되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이런 도발적 행동이 언제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부터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는데, 그동안 연구개발한 신형 핵탄두와 중장거리미사일을 생산과 실전배치 전에 실험해야 하는 현실적 수요가 있음.
- 2019년 북미대화 중단된 이후 수십 차례 각종 단거리미사일·대형방사로켓포를 발사했고, 그런 관행의 연장선에서 단거리미사일의 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
- 8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와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선언함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 확보 차원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서 '전략적 관여'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아래 이유로 대북정책 검토를 조속히 완료한 데 이어 북미대화를 적극 모색하는 '전략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 2017년부터 급속히 증강(수소폭탄·ICBM·SLBM 실험 성공)된 북한 핵·미사일능력은 미국 본토, 아태 주둔미군,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되어, 국가안보 및 동맹 보호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북한의 핵역량 증강과 핵보유국 지위 주장으로 인해 현 상황 지속 시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핵군축비확산 국제레짐을 크게 훼손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미 민주당 행정부는 대북 관여정책의 전통이 있는데, 예를 들면, 클린턴 행정부의 1993년 첫 북미 협상 개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2000년 조영목의 백악관 초청과 북미 코뮌이케 채택, '페리 프로세스', 카터·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오바마 대통령의 미북관계 정상화 시도 등이 있음.
- 미국 싱크탱크와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북핵의 일시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북핵 동결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5.21) 개최로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 5.21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래와 같이 북미 핵협상 재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 한미 정상은 대북정책 목표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갖는 '북한 비핵화' 또는 'CVID' 표현을 배제한 것임.
- 한미 정상은 대북정책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대북 실용적 접근, △대화외 외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병행 추진, △한국정부의 남북 대화, 대북 관여와 협력을 미국이 지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 △한미공조와 한·미·일 3자협력 등에 합의했음.
-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적극적인 북미대화 의사를 밝혔고, 한국의 대북 접근정책을 지지했음.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판적이고 관망적인 태도 지속 전망

-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미의 더욱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며 당분간 기존의 비판적이고 관망적인 입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북한은 미국이 아직 자신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엔진시험장 폐쇄,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 중지 등)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다고 보고, 또한 '하노이 노딜'에서 미국에게 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성과물을 자신하기 전에는 대화 참여에 매우 조심스런 입장임.
-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중에서도 △인권·민주주의·가치 중시 외교원칙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 합의,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제공, 한미의 합동군사태세 유지와 억제력 강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에 더욱 주목하고, 병진노선과 정면돌파에 더욱 집착할 가능성이 있음.

3. 인간안보와 대화 분위기를 위한 대북 식량·보건방역 인도적 지원 제공

남북 및 북미 간 대치국면의 타개와 대화 분위기 조성

- 5.21 한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상대의 선 양보적 조치(미국은 북한의 무조건 대화 참가 요구 vs. 북한은 미국의 선 태도 변화 요구)를 요구하는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기함.
- 북한은 북핵문제로 인한 엄격한 경제제재에 더해 2020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로 경제위기와 식량부족이 장기화 되면서, 북한주민의 영양·보건이 광범위하게 위협받고 있는바, '인도주의적 인간안보' 차원에서도 대북 영양·보건·방역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김정은은 외부의 제재압박으로 인해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미안함을 반복적으로 표명했는데, 이때 영양·보건·방역 지원은 식량위기와 보건위기를 완화시켜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기에 기여할 것임.
- 특히, 과거 북핵협상 역사를 돌이켜 보면, 2017~2018년에도 반복되었듯이 일촉즉발의 북핵위기 또는 전쟁위기에 직면한 이후에야 비로소 북미협상을 위한 동력이 만들어졌는데,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핵협상을 위한 동력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전쟁위기보다 안전한 북미대화 재개 방법이 될 것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및 '동북아 보건방역 협의체'에 북한 참여 유도

- 북한이 매우 엄격한 경제제재 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북 지원을 적시에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이사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물자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심사와 허가절차의 포괄적 면제를 확보해야 할 것임.
- 한국의 직접 대북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당분간 공신력 있고 평판이 좋은 국제기구 및 NGO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기함.
- 한국의 직접 지원 시 북한이 한국의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대북지원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한국이 모니터링을 축소 또는 생략한다면 이 또한 국내외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여 대북 지원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북한이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하려면 그 전에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내부통제가 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한미의 보건방역 및 백신 생산 협력이 활성화 되면, 국내의 백신 부족이 해소되는 대로 북한에 보건방역과 백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대북 보건방역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2020.9)으로 가동 중인 '동북아 보건방역 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추진하며,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4. 북미 간 '잠정합의' 협상을 위한 사전 조치와 고려사항

바이든 대통령의 '프레지던트 김정은' 앞 북핵협상 재개 요구 친서 발송

-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에게 섀범 변경을 요구하며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북핵협상 재개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프레지던트 김정은'에게 친서를 송부할 것을 제안함.
- 동 서한은 △싱가포르 공동선언 계승 및 4개 목표 추진 의사 확인 △북미대화 기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모라토리엄 및 일체 군사적 도발 행위 중단 요구,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항을 실현하기 위한 고위실무협상 조기 개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 내용을 포함.
- 2021월 2월 김정은의 직책명이 '체어맨'에서 '프레지던트'로 변경되었는데, 친서에서 변경된 직책명을 사용한다면 김정은의 '지위' 향상 효과가 있어,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한편, 현재 미국 내 분위기를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아래 사항을 고려할 때 시도할 가치가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간 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일인지도체제를 감안하거나, 이란핵합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착상태의 타개와 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정상 간 소통이 필수적임.
- 이란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대국 지도자와 직접 대화하지 않는 정치적 금기를 깨고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란 종교지도자와 서한교환을 한 것이 핵합의 타결에 주요했음.(이란에 대한 제재압박만으로는 이란핵합의 타결이 불가능했을 것임.)

'잠정합의' 준비를 위해 초기 비핵화조치와 초기 상응조치의 일괄타결 패키지 개발 필요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감안하여, 그 이전에 북미 잠정합의 타결을 목표로 북미 간 상호 수용성이 높은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일괄타결 패키지를 개발할 것을 제기함.
- '1단계 일괄타결(JCPOA의 "잠정합의" 해당)'의 내용으로 △1단계 비핵화 수준, △핵증 방법,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 △제재 완화 수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완화 방안, 북미관계 개선 방법 및 수준, (△한미연합훈련 조정),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종목·방법·수준 등에 대한 한미 간 우선 합의를 하고, 중국과도 협의토록 함.
- 예를 들면,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로서 핵실험·중장거리미사일실험 모라토리엄 약속, 핵무기 생산 중단, 핵분열물질 생산시설 폐쇄와 확인(검증), 영변핵시설 폐기(폐기),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중장거리미사일 시설 폐쇄(미국 관심사) 등을 제기함.
- 미국의 초기 상응조치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과 대북 적대시정책 불추구 약속, 대규모 한미연합기동연습 중단, 북미관계 정상화 절차(수교협상) 개시, 대북제재 일부 완화(석유 도입 상한선 상향 조정, 민수통상 일부 허용, 제재 완화에 스냅백 조건 적용,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 사전승인), 인도적 식량·보건방역 지원 제공 등 제안함.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핵검증 방법은 현 단계에서 핵검증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감안하여 덜 침투적이고 간접적 검증으로 시작해서, 추후 점차 핵검증 수준을 높이도록 함.
- 대북협상의 레버리지로 김정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미관계 개선(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북미 수교협상 개시, 4-노 정책 재천명, 적대시정책 불추구 재천명), △코로나19 방역과 의료보건 지원, △경제 발전(제재 완화), △국제지위 제고(정상 소통, '프레지던트' 칭호 등) 등에 해당되는 유인책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임.

북미 이란핵합의(JCPOA) 모델의 대북 적용 시 주의 사항

-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2개 칼럼(2018.5.2., "To Win a Nobel, Trump Should Look to the Iran Deal"; 2018.6.11.,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노린다면 이란핵합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것을 조언했음.
- 그는 이란핵합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 시 1)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하여, 핵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 제공, 2)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본합의' 타결 등 2단계 접근법 제안
- ※ 이란핵합의의 상세한 협상 경과와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은 전봉근, 『비핵화의 정치』(명인문화사, 2020) 제8장 "이란사례: 부분 비핵화" 참조
- 보통 이란핵합의에서는 '제재압박'이 특히 유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란에서는 (북한과 달리) 제재압박이 유효했던 정치경제적 환경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이란핵합의 성공 배경에는 미국의 제재압박에 더해 △이란핵합의 이전에 강경·반미의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2013) 개방·대화파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취임(정권 교체), △개방경제·수출경제 및 중산층 존재로 제재압박에 취약(개방경제), △영국·프랑스·독일의 3개 유럽국이 이란과 사전협상으로 신뢰구축,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관계정상화를 추구했고, 특히 이란핵합의 성사를 위해 처음으로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 및 종교최고지도자와 서신교환(트럼프-김정은 소통 연상) △농축재처리의 전면폐기가 아니라 핵활동 제한 및 원자력의 평화적 활동 허용, △이란은 (북한과 달리) 국가·체제·정권 붕괴의 실존적 안보위기·체제위기부재로 상대적으로 약한 핵무장 동기 등의 호의적 여건이 존재했음.

한미 정상은 대북정책 목표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갖는 '북한 비핵화 또는 'CVID' 표현을 배제한 것임

이란핵합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 시 1)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하여, 핵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 제공, 2)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본합의' 타결 등 2단계 접근법 제안

발행처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ucpi.ajou.ac.kr>

US-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